

7.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6월 4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시민안전실장)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 상정일자 :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6월 22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 이 폐지조례안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임.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도 〉

구 분	내용 및 대상기준
협 의 대 상	○ 협의대상 : 101개 사업(행정계획 45, 개발사업 56)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산업·물류단지 지정,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 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공원조성, 산업단지 등
대 상 규 모	면적 5,000㎡, 길이 2km이상
위 원 회 운 영	- 위원수 : 20명(시민안전실장, 위원장) - 운 영 : 협의사안별로 위원(5-10명)을 지정하여 검토 - 분 야 : 수자원, 지반,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 농업토목, 산림, 조경

### ○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 ▶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7. 1. 28. 시행)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무에 관한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 ▶ 법 제 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된 기관위임사무<sup>8)</sup>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 ▶ 법률의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입법형식인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연재해대책법 위임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6호 생략)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102조(국가사무의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 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주무부장관 등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 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 ▶ 이번 폐지조례안 제출은 위임 법률의 근거가 사라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입법형식인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맞는 자치법규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국가위임사무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법률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 고

##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 관련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조례)	변 경 (규칙)	비 고
자치법규 명칭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자연재해대책법개정 (2017.10.2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치법규 종류	○ 조례	○ 규칙	자연재해대책법개정 (2017.01.28.) ▶ 조례관련 내용 삭제
위원회 명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검토 ⇒ 심의 (2018.10.23.)
위원회 운영	▶ (구성) 20명이상 ▶ (운영)사안별로 5~10명	▶ (구성) 20명 이상 100명이하 ▶ (운영) 사안별로 5~10명 운영	▶ (대구시) 20~40명 구성
협의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면적) 5천㎡ 이상 (길이) 2km 이상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이상 (길이) 10km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이상 5만㎡ 미만 (길이) 2km이상 10km미만	▶ 면적 및 길이에 따라 세분함
심의 방법	○ 서면심의 원칙	○ 서면심의 ▶ 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소집회의 ▶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대상	▶ 서면심의와 소집회의로 구분
협의 기간	○ 30일	○ 30일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45일 ▶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대상	▶ 협의기간 구분
협의 절차	○ 단계구분 없음	○ 사전검토단계, 협의단계, 협의내용 이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 운영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된지가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개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 2019년 행안부 권고안이 내려왔으며, 이후 코로나19대처로 인해 조례 정비가 조금 늦어졌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